

열린뉴스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2005년 회고와 새로운 다짐

CONTENTS

- 1 열린단상
- 2 연구원 리서치 1
- 3 연구원 리서치 2
- 4 연구원 리서치 3
- 5-6 한·중 학술교류 대회
- 7 해외 리포트
- 8 연구원 소식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
2005년 12월 통권 제7호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12월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http://www.jd.re.kr>
TEL. (063)286-9210
FAX. (063)286-9206

연구원의 불모지대나 다름없는 전북에 올해 초 여성발전연구원과 (구)전북발전연구원이 통합하여 전라북도 출연 종합연구원으로 역사를 새로 쓴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의 종합발전연구원으로 새로이 출범한 전북발전연구원은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며,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왔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연구원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토론을 거치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기업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북에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 올해만도 LS전선을 시작으로 6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전북에 입주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치실적을 올린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중앙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입지후보지 선정 연구를 통해 완주군 이서지역이 혁신도시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광역 도시계획권 연구로 권역별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자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발전전략을 도모하는 시·군 발전방안과 국책사업발굴 등이 마무리되었다. 농어촌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노인, 성매매여성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정책개발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또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 전북라운드 테이블 포럼 유치는 새만금사업을 국제적 시각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화 하는데 큰 전기를 마련했다. 새만금이 국경을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해 글로벌적 시각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주문받게 된 것이다. 국제전문가들은 새만금을 전북발전을 위한 무궁한 기회의 땅으로 평가했으며, 친환경적 개발을 주문하였다.

2005년 3월 출범 이후 전북발전연구원은 거침없이 뛰어왔다. 이제 2006년은 하드웨어 구축에 이어 소프트웨어 구축을 통해 시대변화의 수요에 맞는 실용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본적인 통계자료의 구축에서부터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의 기능적 결합을 유도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분야로의 연구방향을 전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전북발전연구원의 재도약을 다짐해 본다.

전북발전연구원장 한 영 주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허와 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성산업 육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윤락행위방지법은 이 땅에서 성매매 근절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상태로 사문화되었으며, 오히려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과 착취를 묵인하거나 혹은 조장하는 역기능마저 수행하였다. 이에 여성단체는 윤락행위방지법 하에서 성매매 근절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성매매와 관련된 중개업자와 업소, 그리고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수반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2000년 9월과 2001년 1월에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촉매제가 되었다. 군산의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은 여성단체가 그 동안 주장해 왔던 성매매산업의 왜곡된 착취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에 강제로 내몰린 세월 동안 침묵했던 성매매여성은 죽음 이후 자신의 기록을 통해 피맺힌 삶을 절규하였고, 기록은 또한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성매매여성의 희생과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2004년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혹은 성매매특별법으로 지칭)이 제정되어 그해 9월 23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은 우리사회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여성의 감소,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공개적인 성매매의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반면, 음성적인 성매매의 확산이나 그에 따른 성매매 규모 파악의 어려움, 성매매업소 및 종사자의 처항에 따른 사회갈등 등의 부정적 문제도 수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기점으로 남성의 성매매 의식이나 행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성인 남성 502명을 면접조사하였으며,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의식과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매매여성 120명을 면접하였다. 아래 내용은 조사를 통해 발견한 연구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자문회의를 거쳐 본 연구원의 최종보고서로 12월 중에 출간될 예정이다.

먼저 성인 남성의 성매매 의식과 구매행위에 관한 조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록 1년이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성구매의 정당성, 필요성, 업무성, 접근 용이성, 여성의 자발성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성구매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든 반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45.4%를 차지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지

난 1년 동안 성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3%로서 성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24.1%)보다 적었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구매 경험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1/2 이상이 그 이후 성구매를 중단하였다. 특히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들 중에는 성매매방지법을 잘 이해하고 있거나 성매매 특별단속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성매매 경험이 없는 남성 중에는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거나 혹은 성매매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의 결과는 성매매방지법이 남성의 성매매를 축소시키는데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다.

다른 한편, 성매매여성과의 면접을 통해 확인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는 아래와 같다. 즉 성매매여성 가운데 다수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지만, 그 감소는 성매매집결지와 유흥업소, 그리고 노래방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안마시술소나 티켓다방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추진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즉 정부의 단속활동이 성매매집결지에 집중하면서 성구매가 축소되었고, 그 결과 성매매여성 또한 성매매집결지를 떠나 정부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업소 혹은 '은밀한 사적 공간'으로 숨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안마시술소나 티켓다방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구매는 공개적이지 않은 관계로 적발이 쉽지 않다. 그리고 성매매여성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매매를 계속할 것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여성이나 업주가 정부와의 충돌을 자신보다 정부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프로그램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간주하면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성매매방지법은 과거 성구매의 주요 당사자인 남성의 경우 성매매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구매행위를 크게 축소시키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매매집결지에 집중된 단속과 제한된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성매매의 음성화와 성매매 여성의 건강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방지법의 효과가 사회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 또한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근시안적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인내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원장 박재규

생태발자국지수(Ecological Footprint)를 이용한 전라북도 환경용량평가

전라북도는 정부의 산업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결과로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만금, 동부권, 기업도시 등 다양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이라는 논리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친환경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이해의 간격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라북도 환경정책의 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수용용량과 환경가용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가 선행될 때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역의 환경용량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용량이란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변수들이 다양하고, 환경용량을 보는 학자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환경용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동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지역의 환경용량을 파악하면, 각 지역의 지속가능성 지표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지표체계를 통해 각 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의 정도나 개발사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까지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용량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델은 생태적발자국지수(Ecological Footprint), 에머지분석(Emergy), 오니시분석(Onishi),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등이 있지만, 여기에는 생태적발자국지수 (Ecological Footprint : EF)에 의해 분석된 전라북도의 환경용량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생태적 발자국지수는 자연의 생물학적인 생산능력을 자연자원의 소비와 비교하는 지표로서, 한 국가의 발자국지수는 국가에서 소비하는 식량과 섬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의 유지와 제반 여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1999년 지구의 생태적 발자국지수는 1,370억 헥타이며 1인당 2.3지구 헥타(global ha)였다. 지구 표면의 25%에 해당하는 약 1,140억 헥타가 식물자원을 보호하고 생산하는 지역이며, 나머지 75%는 생물의 생산성이 낮은 사막과 빙하지대, 그리고 심해로 이루어져 있다.

웨커나켈과 리즈(1996)는 생태적 발자국지수 산정을 통하여 캐나다, 미국, 유럽 각국, 일본, 한국, 호주 등의 소비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전라북도의 생태적 발자국지수는 음식, 건조환경, 산림, 에너

지 등 4개 개별지수 합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가중치는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음식부문의 산정을 위하여 미국, 맥류, 서류, 잡곡, 두류, 채소, 과일, 특용작물, 축산물, 유제 등의 소비량을 파악하였으며, 건조환경부문의 산정을 위하여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의 사용량을 파악하였고, 에너지부문의 산정을 위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방카-A, 방카-B, 방카-C, 제트A-1, JP-4, 프로판, 부탄, 도시가스, 무연탄, 전기 등의 소비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음식부문의 EF 즉, 1인당 소비에 필요한 면적은 1994년 0.898에서 2003년 1.1069로, 건조환경부문은 1994년 0.0228에서 2003년 0.0287로, 산림부문은 1994년 1.038에서 2003년 0.65로, 에너지부문은 1994년 1.00에서 2002년 1.38로 산정되어 총 EF가 1993년 2.959에서 2002년 3.307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분석되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타 시에서 연구된 EF의 분석결과와 비교한 결과, 전라북도의 EF지수가 타지역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비수준이 절대 규모에 있어 낮다는 의미이며 자연산출물(단위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소비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생태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전라북도와 다른 지역의 EF지수 비교

구분	인구	면적	1인당 EPL	EF	생태적자	면적 배수
단위	명	ha	ha/인	ha/인	%	배
전라북도 (1994)	2,004,944	804,177	0.350	2.96	745	7
전라북도 (2002)	1,961,572	805,094	0.352	3.31	839	8
청주시 (1989)	453,470	11,901	0.0185	1.73	6,960	51
청주시 (1999)	570,622	15,332	0.0175	1.90	10,775	71
울산시 (1994)	946,375	-	0.012	4.62	38,375	-
울산시 (1999)	1,027,280	-	0.085	4.05	4,665	-
서울시 (1987)	9,991,089	60,540	0.00229	3.66	159,769	604
서울시 (1997)	10,389,057	60,552	0.00187	4.32	230,959	742

EPL(Ecologically Productive Land, 생산적토지면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의 총계한 값

| 환경 · 지역개발연구팀 김 보 국

전북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경력개발 방향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전통적인 생산수단인 노동이나 자본보다 지식·과학기술이 더 높은 가치를 발휘함에 따라 지식과 과학기술을 체화한 인적자본이 과학기술 강국을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나노, 정보, 생명기술 분야 등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개발과 활용에 국가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배출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실태와, 수요증대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고급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각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DB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전라북도 여성과학기술인력의 DB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과 지역의 우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경력개발에 따른 애로 및 지원요구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력 DB구축 대상은 전라북도의 산업체, 연구소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 250여명이었으며, 로서 재직기관, 학력 및 경력 사항, 학·협회활동사항, 전문분야, 상세분야, 자격사항,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수상실적, 논문 및 저서, 연구실적 등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전라북도 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원·육성 방안마련을 위해 조사대상자 가운데 149명을 대상으로 직무경험과 경력개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요구에 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직업선택의 동기는 능력과 일 선호도에 있으며 이직경험의 비율은 40.3%, 전공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89.9%로 비교적 높았다. 취업활동 중 애로사항으로는 가사노동과 육아로 인한 시간 압박과 연구 집중도 저하(58.8%)를 가장 높은 이유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연구시설 및 연구비 부족(57.7%),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기회 부족(5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시설 및 연구비의 부족으로 인한 직무상의 어려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개인 및 소규모 연구지원사업에서 여성과학자들이 연구책임자로서 얼마나 신청했는지를 알아 본 결과, 6개 지원 사업에 대해 최저 2%에서 최고 16.8%로 아주 낮은 지원율을 보였다. 이는 중앙의 조사결과(최저 7.9%에서 최고 26.9%)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연구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자격이 없어서 25.7%, 다른 연구를 수행 중이어서 19.5%, 선정될 가능

성이 낮아서라는 이유가 18.6%나 되었다. 연구비 지원자격이 박사급 이상으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서라는 이유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연구비 지원심사과정에서 여성우대조치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64.3%)고 응답해 연구비 지원신청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불신과 지역과학기술인력이 갖는 취약성으로 인해 연구비 지원 신청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비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식 및 양성평등 의식제고가 38.9%, 채용목표제 도입으로 지원자격을 갖춘 여성과학자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9.5%로 나타났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활용을 방해하는 요소는 남성중심적인 과학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특성상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중단되면서 재진입이 어려운 것 등이다. 아울러 연령, 학력, 지위가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줄어드는 '누수현상'과 진입장벽을 극복한 이후에 여성과학기술자들은 하위직에 몰려 있거나 경력이 쌓여도 승진에서 차별받는 '유리천장' 등도 커다란 장애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는 과학분야의 특수성과 여성의 사회활동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와 향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이학·공학의 분야 간 균형달성 및 고학력화 등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제고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전문분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수립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에 관한 면밀한 자료구축이다. 이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 및 과소활용의 심각성이 비교 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일관되며 비교 가능한 자료의 부재는 유효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주요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원이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려는 계획은 시의적절하며 이에 대한 활용도가 기대된다.

다만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구축된 자료가 적재적소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계속적인 업데이트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 시스템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 여성정책연구팀장 조 경 옥

조화로운 발전의 길 탐색, 한국과 중국의 경험 비교

본원 한영주 원장 등 5명은 중국 강소성 사회과학원의 초청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3일간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석, '조화로운 발전의 길 탐색 - 한국과 중국의 경험 및 비교'라는 학술세미나에서 본원, 강소성 사회과학원, 동아대학 등 총 12명이 한국과 중국의 사회발전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지는 논문 발표에 이어 한영주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 내용을 1) 한국과 중국의 국가발전, 2) 양국의 농촌발전, 3) 양국의 기업투자와 현지화 전략, 4) 양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제기된 환경 및 소득재분배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편집자註

1) 한국과 중국의 국가발전

한국과 중국의 국가발전과정이 근대 이후 매우 상이한 진로를 선택하였던 까닭에 양국의 국가발전과정 전체를 비교하기 보다는 한국의 경험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질의와 논의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그리고 최근 중국경제가 개방화와 세계화로 이행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한국사회 경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1989년 천안문 사태(민주화운동)를 경험한 중국은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향후 또 제2의 천안문 사태 혹은 민주화운동에 직면할 가능성 때문에 잠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경험한 민주화와 세계화과정, 그리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은 중국사회의 미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과정을 통해 권위주의 군사정권이 해체되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질서를 도입하였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원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 양산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중국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그 결과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변화 욕구 및 사회적 모순 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국가 중심의 단일체제 운영이 갖고 있는 지나친 성장 중심적 접근에 따른 자연과 인간의 괴리 가능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 학자들은 한국사회의 시민사회조직 활성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는 국가 단독의 정책입안 및 추진을 견제할 수 있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 국제사회의 압력에 경직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국가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유연성 확보라는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양국의 농촌발전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농업과 농촌경제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써 농업내부보다는 도시와 농촌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그 해결책으로서 사회공평의 목표 실현, 재정체제 개혁, 농



촌생산요소의 시장화 개혁, 농촌취업과 보장체계의 수립과 건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전환은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농의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시주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 확대 및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농촌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 양국 사이에 차이점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것은 일차적으로 양국의 정치경제운영 원리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로서 국가정책 추진이 용이한 까닭에 문제해결에 있어 기본적 원칙과 분야를 설정하여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지만 한국은 다원적 민주주의국가로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공존으로 갈등적 상황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는 동시에 그 추진 또한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성향이 있다. 여기에 한국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성 때문에 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라는 시각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정책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만완화와 갈등해소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3) 양국의 기업투자와 현지화 전략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한국에 직접투자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중심부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중국기업들은 한국에 서비

스업 중심으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기업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중국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한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풍부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중국의 주요한 투자타겟이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기업의 상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국 기업이 현지에서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점이 제시되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한국과 중국기업의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양국은 시장개척과 더불어 우수한 기술이전, 시장접근의 용이성, 원활한 분업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공동화 예방 등 양국 모두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대립이나 갈등, 경쟁적인 관계보다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보완적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함으로써 양국 모두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윈-윈전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 기업은 기존의 투자 패러다임을 개선하여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투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데 양국 학자들은 공감하였다. 특히 기업투자의 현지화 전략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투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의 기업문화와 피고용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접,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및 봉사활동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4) 경제발전과정에서 제기된 환경 및 소득재분배 문제

한국사회가 경험했듯이 중국 또한 눈부신 경제발전과 성장이라는 빛 뒤에 드리워진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압축적, 초고속 성장이라는 경제발전의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과거 한국의 경험과 유사성을 갖는다. 즉 중국의 국가정책은 경제와 자원,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식하면서도 여전히 경제발전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환경파괴가 불가피 하였고,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 경제와 자원,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고려하여 각종 관련 법규들을 완비하는 동시에 기술과 생산생활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모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정책 추진 및 전개과정의 주체로서 민간이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환경보호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중국사회의 시민사회조직(NGO)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환경보호 의식도 약하며, 환경운동에 소요되는 재정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 중심의 환경보호 정책은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92년 이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모델로부터 가시적 발전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가시적 발전전략의 중심핵은 순환경제의 도입으로 이는 생산, 건설, 유통과 소비

등에서 최대한 자원을 종합이용, 재이용, 친환경적 기술발전 환경보호 산업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개혁과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소득재분배 문제는 경제발전이 비슷한 국면에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불균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소득 재분배의 궁극적 목표는 전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보편적 향상이다. 그러나 개혁개방화 이후 국가경제의 규모 확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착과정에서 국민소득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록 한국사회도 IMF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소득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중국의 경제정책 원리를 비롯하여 내부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즉 중국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원화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시장경제요소와 전통적인 비시장경제요소들의 공존 및 충돌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도가 광활한 중국에서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격차 또한 소득의 증가속도에서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한국은 토지개혁을 통해 농업내부의 소득균등화 기초를 마련하고 교육기회의 평등화를 통하여 공업화 초기에 경제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수혜할 수 있었으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던 노동집약적 공업화 전략 등은 사회균등화를 추진하는 발전적 모델로서 중국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농촌과 농민 내부의 문제해결을 통해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동서부간의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서부대개발 정책, 사회보장제도건설 추진 등 일련의 사회균등화 전략과 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결과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5) 마무리

이상과 같이 중국 강소성 사회과학원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는 ‘조화로운 발전의 길 선택 - 한국과 중국의 경험과 비교’라는 주제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는 한국사회의 경험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집중되면서 한국 학자의 경우 중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당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이 점은 학술세미나를 주최하는 당사자로서 강소성 사회과학원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본 연구원이 주최하게 될 학술세미나 또한 우리 경험보다는 중국이 다방면에 걸쳐 갖고 있는 장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치밀한 프로그램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 | 사회복지연구팀장 박재규

유럽의 문화관광산업은 주민들이 만들어 간다

선진국들의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공동학습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실시하여 선진문화관광산업에 필요한 지역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혁신 자원들과 접촉을 통해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할 혁신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 클러스터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대학·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스위스의 문화관광도시, 독일의 생태환경도시를 9박10일동안 시찰했다. 이번 해외시찰은 문화관광 정책의 일관성,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 해결 방안, 사업계획의 동기, 자원조건, 목표설정 등에 따른 과정과 결과,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혁신주체들이 지역에서 반영할 수 있는 조건과 제언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수를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기어할 수 있는 학습기회로 삼는데 주요 목표를 두었다. 편집자 註

스위스의 문화관광도시와 독일의 생태환경도시의 공통적인 특성은 기존의 화려한 도심지역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차별화시킴으로써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스위스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루체른의 자원은 피어발트슈테터 호수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다리 '카펠교'가 도시의 상징으로 버티고 있다. 루체른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알프스의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만은 아니다. 알프스의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루체른시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문화도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열리는 국제음악제에는 수만 명의 음악애호가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런 국제규모의 음악제를 개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1998년에 문을 연 '루체른 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등장하고 전 세계에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게 된 것이 모두 이 건물 덕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루체른의 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를 바꾸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통한다. 5층 규모의 높은 천장과 최소화한 발코니의 넓이 등 최상의 음향을 연출하기 위한 각종 배려로 루체른 홀은 '천상의 콘서트 공간'으로 칭송받으며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공연하고픈 장소가 되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음악의 생명인 음향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미국의 음향전문업체와 공동협력으로 7년여 간의 실험과 연구 끝에 완공되었다는 관계자의 귀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스위스 중부 우리주(州)의 주도(州都)로 인구 8,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알트도르프(Altdorf)는 윌리엄 텔(William Tell)이라는 역사인물을 테마로 한 관광코스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윌리엄 텔이 태어나서 자라고 생을 마감한 지역까지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인하고 있다.

스위스의 알프스에는 관광 전용도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유명한 고개를 넘는 도로도 관광용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생활도로로 활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동을 위해 고개에 만들어 놓은 생활도로가 최근 들어 관광코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또는 버스와 승용차로 2시간이 걸리는 고



〈루체른 문화컨벤션센터〉

개를 알프스의 멋진 전망과 함께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와 비교하여 보면 설악산의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 지리산, 무등산, 한라산 등의 고속화도로가 개설된 것과는 전혀 상반된 생활도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Freiburg)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는 미래 환경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다. 친환경적인 혁신 정책으로 '세계의 환경도시'를 꿈꾸는 시민이 사는 도시, 프라이부르크는 브라질의 꾸리찌바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환경도시이며 독일의 환경수도이다. 독일 최대의 삼림지역 슈바르츠발트에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숲을 보기 위해 연간 600만명이 흑림을 찾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울창한 흑림의 관문도시 프라이부르크를 거친다. 흑림은 프라이부르크의 정원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흑림은 인근의 도시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죽어가는 흑림을 되살린 것은 다름 아닌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었다. 70년대에 흑림의 나무들이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근 비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당시는 세계가 제1차 오일쇼크를 겪고 있던 시기로 원자력 발전소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흑림의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흑림의 환경재앙을 목격한 시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흑림이 없는 프라이부르크는 없다며 줄기찬 반대운동을 벌였다. 오랜 저항 끝에 원전건설 계획은 백지로 돌아갔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은 흑림을 보호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막는 유일한 길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임을 깨달았다. 대량소비생활을 반성하게 된 시민들은 생필품처럼 여기던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독일 최초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태양열을 이용해 에너지 자립에 나서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의 주민들은 자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생태도시를 만들어 세계적인 생태학습도시로 성장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형, 현대화, 거대함, 시간단축, 지역발전이라는 단어 속에서 여유로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의 클라우젠은 전통 생활도로의 관광자원화, 루체른의 문화컨벤션센터, 알트도르프는 역사인물테마 관광코스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주민이 직접 나서 산림훼손을 막고 대안으로 생태환경도시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지혜를 우리는 되새겨야 할 때다.

| 문화·관광연구팀장 성기만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본원은 지난 11월 23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명)로부터 2005년도 하반기 정기행정사무 감사를 받았다. 본원 한영주 원장은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의원들은 연구원의 독립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자립적 과제 발굴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 오는 15일-16일 전주 코아리베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2일간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시도협의회의장단과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협의별로 그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

본원 한영주 원장은 12월 7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기획 및 정책 관련 공무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본원 연구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청사시대 전북비전을 제시할 국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07년을 대비하는 국책 대상 사업으로 본원의 연구결과, “국책사업발굴을 위한 14개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제안된 64개 사업,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현상공모”에 응모된 33개 사업을 최종 검토한 결과 총 19개 사업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본원이 2005년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발굴방안의 시행”, “국책사업 발굴에 대한 주민의 참여 의식 확대” 및 “14개 시·군과 연구원 간의 연계망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14개 시·군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약속했던 후속 조치였다. 또한 2005년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터넷, 언론 및 우편을 통해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였던 「국책사업 발굴 현상 공모」에 응모한 사업들에 대한 결과 보고였다.

본 보고회에서 제시된 사업은 본원의 연구위원들로 구성된 TF팀이 발굴한 사업, 14개 시·군의 제안 및 응모 사업들에 대한 각 연구위원들의 개별 검토 분석, 도의 실국 및 외부전문가들과의 1·2차에 걸친 평가 분석의 실시 과정, 특히 사업의 목적, 배경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이냐 기대 효과적 측면에서 사업의 보고 내용 범주를 명료화한 결과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또 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

서 향후 국책사업의 효율적 발굴방안으로 도지사 산하에 별도 산·관·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책사업심의·평가·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국책사업의 발굴·유지를 위한 행정, 의회, 중앙당과 도정 간의 협의기구의 설치·운영, 국책사업 발굴 간담회 개최 및 아이디어의 상시 수렴 체제의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번 보고회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정련화된 국책사업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안·추진하기 위해 가칭 「국책사업발굴·유지기획단」을 설치 운영기로 했다.

19개 국책사업 LIST(잠정)

사업명	사업내용
서남권 첨단유통단지 조성	제4차국토종합계획, 제2차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근거 유통단지를 조성
남원 Flora Valley	지리산 자생식물연구단지, 바이오물방산업단지, 지리산 허브건강타운 조성사업
순창 장류 Valley	장류테마, 원료생산단지, 교육기관 등 설립
오수 의견 도시 조성	오수 의견을 테마로 한 문화형성과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문화관광전원도시 육성
진안 약용타운 조성	약초생산단지, 연구단지, 스파관광, 특성화교육 등
복합승마레저도시 조성	관광, 농업축산, 체육, 의료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 복합레저승마산업도시 육성
국민화합센터 건립	무주 태권도공원에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문화예술센터, 예술의 전당, 화합 경기장, 무궁화공원 등 건립
푸드 콤비나트 조성	단계별로 첨단식품단지, 육종산업혁신도시, 새만금 국제물류기지 건설
새만금 ICT 연구센터 건립	USN새만금 시·공간 정보관리 기술혁신센터 설립을 통하여 IT관련 산업의 첨단화 및 생산 기술지원 체제구축
새만금지역 기간교통망 구축	새만금에 대비한 공항 및 항만시설 확충을 통해 접근성 확보 위한 교통망 구축
새만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변산반도, 새만금방조제,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관광레저기업도시건설
군산 기업도시 건설	새만금 완공대비 물류중심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도시건설
익산 inno-테크노피어 조성	연구개발, 한·양방, 방사선영상장비, 체험 및 홍보관 건립 등
전주권 국가제2연구단지 조성	원천소재산업, 생명산업, 청정에너지산업연구단지 조성
전통농업문화 중심도시 육성	김제를 현대와 전통농업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거점도시로 육성
장수(長壽) 실버산업 프로젝트	김제에 실버용품 및 식품산업단지와 실버의료 산업단지 조성
정읍 RFT 산업클러스터 조성	국제원자력센터지정 국제협력센터와 첨단방사선센터 유치 등을 통해 성장 동력화
해양 선사문화권 조성 사업	고창지역의 천연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양 레포츠 체험관광지조성
국립해양과학청소년 수련원 건립	해양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 확산으로 미래 해양문화발전 및 미래 해양자원활용의 극대화

■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 원고성격 :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 수시모집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켓과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알림

■ 「연구과제」 공모 ■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